

무안공항 활주로 침하...광주공항 국제선 재개하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의 내구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향후 재개항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맞물려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전남광주통합 특별시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7일 전남광주특별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본사는 지난달 무안공항 시설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활주로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점검 결과는 발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활주로 문제로 무안공항 재개항이 1-2년가량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안공항이 장기간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호남권 주민들이 국제선을 이용하기 위해 인천·김해 등 다른 지역 공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불가피하다. 지역 관광·여행업계와 수출입 기업 등에도 항공 교통망 단절에 따른 부담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광주공항 국제선의 연내 임시 취항을 검토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은 옛 광주시가 지

국토부·공항공사, 지난달 시설 점검

결과 미발표...내구성 문제 있는 듯

재개항 차질...1-2년 지연 관측도

광주 연내 임시 취항 방안 등 거론

특별시 “국토부 통보 받은 바 없어”

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2008년 모든 노선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면서 광주공항 국제선은 운항이 중단됐다.

특별시는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무안공항 측을 통해 지난달 시설 점검이 이뤄진 사실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점검 결과나 후속 조치는 공유받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활주로 침하는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점검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재개항 일정에 미칠 영향도 아직 불분명하다.

특별시는 출범 이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현안을 고려해 무안공항 조기 재개항과 국제노선 확대를 추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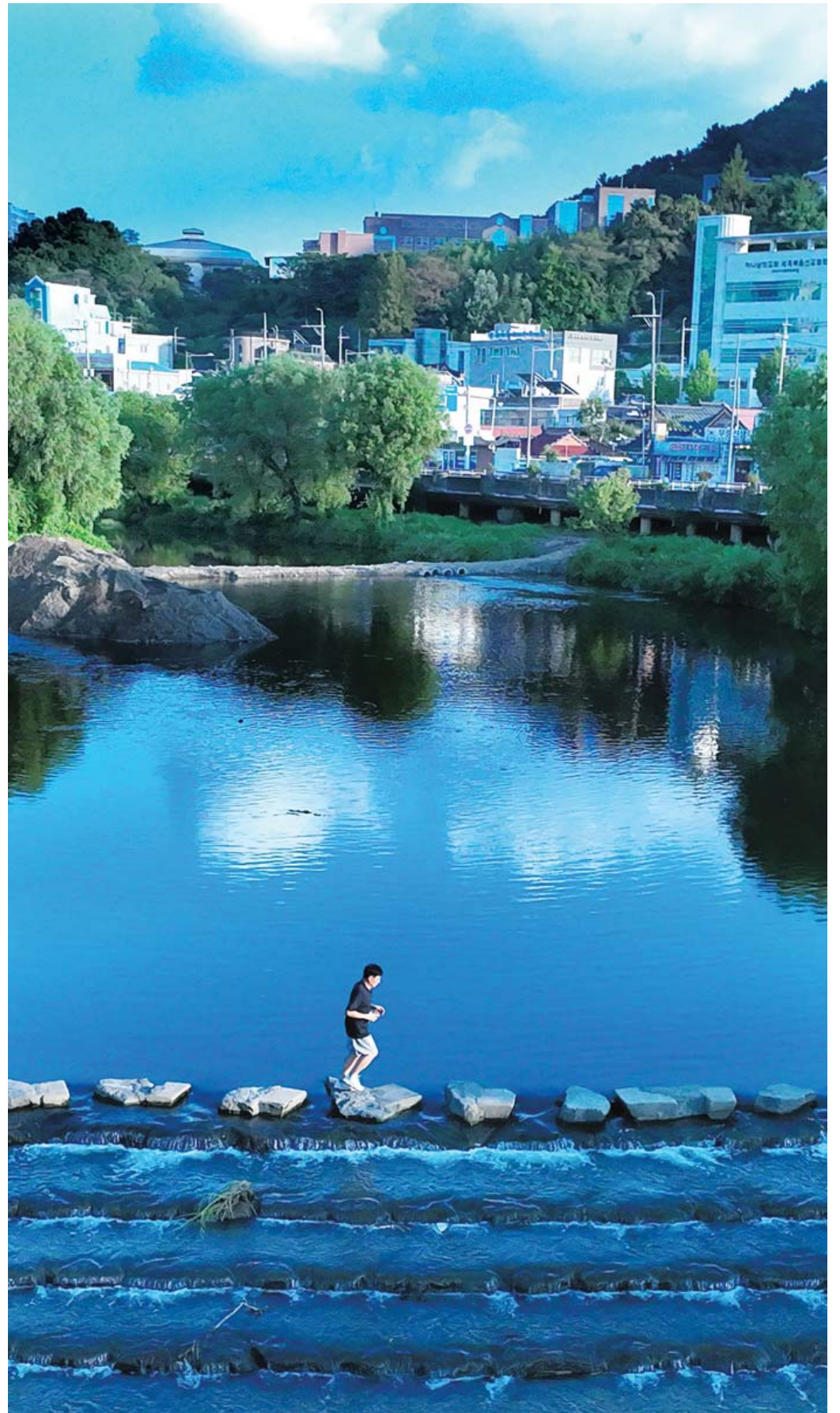
지난 2일에는 김원준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광주공항을 방문했다. 국제선 임시 취항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구체적인 방문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별시 광주시청사와 무안청사 공항 담당 부서 모두 무안공항 재개항 지연이나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과 관련한 내용을 정부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시 관계자는 “무안공항 재개항이 1-2년 늦어진다는 내용이나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며 “관련 기관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국제공항은 2024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재개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명진기자



정검다리 위로 성큼 다가온 가을
절기상 풀잎에 흰 이슬이 맺히며 가을 기운이 짙어진다. 백로(白露)인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설월교 인근에서 한 시민이 파란 가을 하늘이 비친 물길 위 정검다리를 건너고 있다.
/김애리 기자

‘의대 탈락’ 목포·서남권 철야·단식...반발 ‘최고조’

특별시의원 등 기자회견...“재심사하라”

전남연구원장 사퇴 촉구·궐시장 책임론도

市 “부실·불공정 반박...평가 개입 안해”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에 대한 목포·서남권의 반발이 철야·단식 농성으로 변지며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국립목포대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소송과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한데 이어 지역 정치권과 장애인단체는 재심사와 심사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전남연구원장 사퇴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목포·서남권 의원들은 7일 오전 시의회 전남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대한 검증과 재심사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부터 후보대학 재심사 등을 요구하며 철야·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36년을 기다린 서남권 주민들의 염원을 단 한 번의 졸속 심사와 불공정 심사로 끝낼 수 없다”며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연구원장에게 후보대학 심사 부실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민형배 특별시장에게는 심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를 향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국립의대 신설 심사를 중단하고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검증한 뒤 재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특별시의회 문예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과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단체들도 이날 무안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사와 관련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목포대의 법적·행정적 대응도 진행되고 있다.

목포대는 지난 3일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

께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4일에는 후보대학 선정·추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목포대가 제출한 공문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시가 제출한 추진계획서와 목포 지역에서 문제라고 제기하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운영하는 ‘지역의대 설립 기확단’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시는 같은 날 잇따른 부실·불공정 심사 주장에 대해 후보대학 심사와 평가를 전남연구원에 위탁했으며, 심사위원 구성이나 배점·평가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사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평가표와 채점표 등을 특별시의회 등에 이미 공개했으며 추가적인 공개 요구에도 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시 관계자는 “평가 결과는 심사위원들의 판단 영역”이라며 “특별시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30년 반도체 양산을 향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앞도적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